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평가 기자간담회

---

# 첫 번째 청문회의 쟁점 및 앞으로의 과제

---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20호

주최 |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 프로그램

- 13:30 사회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13:35 인사말·총평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13:45발표1** **진상규명소위원회 청문회 쟁점 및 평가**  
박주민 416가족협의회 대리인, 변호사
- 14:00발표2** **안전사회소위원회 청문회 쟁점 및 평가**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14:15발표3** **지원소위원회 청문회 쟁점 및 평가**  
박진 4.16연대 운영위원
- 14:30발언** **1차 청문회 이후 앞으로의 과제**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 14:40 질의응답



## 진상규명소위원회 청문회 쟁점 및 평가

---

박주민 / 변호사, 416가족협의회 대리인

### 1. 청문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1차 청문회(이하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한 축소와 예산 미반영 그리고 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의 발견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음.

이로 인해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번 청문회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음.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해 새로이 부각되어 나타난 쟁점들이 다수 있었음. 이러한 쟁점들은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임.

물론 대부분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자들의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모른다’ 등의 면피성 답변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한 방청객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하였음.

이는 짧은 준비 기간, 어수선한 분위기에 기인한 바 크겠지만, 질문자로 나선 위원들의 준비부족에 기인한 바도 있어 보임. 일례로 형사소송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한 확인 정도에 그치고 최근까지 제기되어 온 새로운 의혹들에 대한 질의를 전혀 하지 못하는 위원들도 있었음.

## II.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쟁점)

○ 123정에 탑승했던 정장 이하 해경들은 초기 구조한 사람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임을 몰랐는가

⇒ 이번 청문회 1일 차에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하여 123정장 이하 해경들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그들이 선장과 선원임을 알면서 우선 구조했으리라는 점을 신문

- 선장과 선원 일부는 세월호의 조타실에서 나왔음
- 검찰수사 시 구조된 14명의 선원 중 9명이 구조 당시 자신이 선원이라 말했다고 진술
- 참사 당시 오전 10시 6분경 123정이 세월호에 접안하여 구조작업을 할 때 해경과 구조된 선원이 작업을 같이 진행.
- 구조된 선원 김영호는 검찰수사에서 123정장 김경일에게 자신이 세월호에 구조하러 가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
- 구조된 선원 중 일부는 123정의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
- 구조된 선원 14명 중 9명이 구조 당시 작업복을 입고 있었음
- 참사 당일 10시 50분경 구조되어 123정 위에 있었던 사람 52명 중 47명을 전남 707행정선에 인계하였고 5명을 남겼는데 이 5명이 모두 선원이었음
- 참사 당일 10시 28분경 구조된 선원 김영호는 123정장 김경일로부터 김경일의 핸드폰을 빌려 자신의 집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
- 123정장 김경일이 TRS로 세월호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보고하였음.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고 있었던 당시 이런 보고를 하려면 구조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수밖에 없는데 당시 선원들을 구조한 상황이었음.

→ 이에 대해 123정 김경일 정장을 비롯한 해경들은 우선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 들인줄 몰랐다고 거듭주장하였고, 구조한 사람들과는 신원확인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수난구호법 제35조 제1항은 구조된 사람들의 신원확인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123정 김경일 정장을 비롯한 해경들 역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진술

○ 참사 후 잠수사 500명을 투입하여 수색하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인가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작년 4월 17일 대통령을 옆에 두고 ‘500명의 잠수사를 투입해서 수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브리핑 함. 그런데 이 당시 실제로 투입된 누적 잠수사는 20~80명에 그친 상황이었음. 이후 이런 허위 브리핑의 내용은 전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이 되었음. 이번 청문회 2일차에서는 이렇게 실제 상황과는 다른 브리핑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신문 함.

→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그 당시 ‘투입’이라고 했던 것은 실제 투입이 아니라 ‘동원’한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

⇒ 이와 아울러 이번 청문회 2일 차에서는 참사 당일 해경이 작성하여 유관 기관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 잠수사 160명을 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160명을 투입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신문함.

→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실제 잠수한 인원뿐만 아니라 보조인력과 대기인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숫자라고 진술

○ CN-235 등 고정익 2대 역할은 무엇이며,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가

⇒ 이번 청문회 1일 차에서는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었지만,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CN-235 등 고정익 2대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졌음. CN-235(B703) 등 고정익 2대는 구명벌을 탑재하고 있었고, 높은 고도에서 세월호와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수 있었기에 구명벌 투하 혹은 수상의 구조세력 등과 교신하며 세월호 상황에 대한 전파를 할 수 있었음. 그러나 구조작업에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CN-235(B703) 등 고정익 2대가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으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리고 왜 구조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질문되어졌음.

→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및 이춘재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은 위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에 없다고 진술.

○ 구조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던 502호 헬기는 누가 돌려 세웠는가

⇒ 이번 청문회 1일차와 2일차에서는 참사 당일 9시 17분에 서해지방경찰청장을 태우기 위해 구조인원을 태워 현장에 가던 502호 헬기를 돌려 세운 것에 대해 질의하였음

→ 이에 대해 서해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참사 후 지금까지 누가 그런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함.

○ 작년 4월17일 구조와 수색을 위한 잠수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대통령이 현장 방문하던 작년 4월 17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구조와 수색을 위한 잠수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가 이루어졌음

→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당일 파고가 높은 등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잠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 그러나 당시 해상날씨는 좋았고, 파고는 0.5~1m에 불과하였음

○ 해경 등이 작성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한 상황보고는 왜 부정확한 내용을 담

고 있는가

⇒ 이번 청문회 1일 차와 2일 차에는 참사 당시 해경 등이 작성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한 각종 상황보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조와 수색에 오히려 혼선을 일으켰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음.

⇒ 그 예로 참사 당일 11시 34분에 전파된 서해청 상황보고서 2보에는 “11:24 목포 122구조대 4명 여객선 투입”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후 6시8분에 전파된 5보에는 “11:24 목포 122구조대 4명, 여객선 진입수색차 1차 시도”라고 쓰여 있었으나 11시24분에는 목포 122구조대가 어선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고, 실제로 세월호에 대한 진입시도가 있었던 것은 참사 당일 오후 1시로 알려져 있음.

⇒ 또한 2014년 4월 17일 07시에 국방부 상황보고서를 보면 참사 당일인 4월 16일 09시 04분의 조치 사항으로 ‘3함대 가용 함정, 항공기 현장 투입, 구조 작전 수행’이라고 보고했는데, 해군이 한 일은 하잠색을 설치한 것뿐이며 투입된 항공기와 함정의 경우 구조작업에 임하지는 않았음

→ 이에 대해 증인들은 각종 상황보고를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아니기에 어떤 연유에서 이러한 상황보고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며, 단지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

○ 구조투입된 세력에 대한 잦은 보고요구, 특히 현장 영상을 보내라는 요구가 구조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

⇒ 123정 정장을 비롯한 해경들이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통신을 한 것, 서해상황담당관과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에 내려가 있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구조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다는 생존 화물기사 전병삼의 진술, 청와대 영상요구(다른 것들은 하지 말고 영상부터 보내라고 명령

등)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청문회 1일차와 2일차에서는 지나친 상황 보고명령이 오히려 구조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신문이 이루어졌음.

→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이러한 보고요구가 구조에 방해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

→ 그러나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잦은 보고요구 등이 구조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바 있음.

○ 왜 여러 버전의 TRS 녹취록이 존재하며,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가

⇒ 이번 청문회 1일차에서는 해경이 작성하여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했던 공용무선망(TRS) 녹취록이 3개의 버전으로 존재하며, 일부 녹취록에서는 해경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화(예를 들어 참사 당일 9시 27분경 현장에 출동한 헬기가 승객들 대부분이 선내에 있다라고 했던 부분 등)가 잘 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지 않아 기재할 수 없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해 신문이 이루어졌음.

→ 이에 대해 증인들은 TRS녹취록의 작성주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 123정장등의 허위 기자회견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가

⇒ 123정장 김경일은 지난 해 4월 28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퇴선명령을 하였고, 창문 등을 깨는 등 구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이후 검찰수사 결과 이러한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이 기자회견은 ‘위’의 지시에 의하였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음. 이에 이번 청문회 1일차와 2일차에서는 이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음.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자신이 이러한 기자회견을 지시하였다고 시인은 했으나 구체적인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이 기자회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던 '초기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의 작성자 등 역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 Ⅲ. 앞으로의 과제

-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거나 중요한 사안이지만 조명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명확하게 각 의문들이 해명되지는 못하였음. 이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명확히 밝혀지는 과정이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502헬기를 돌린 자는 누구인가, ‘초기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TRS녹취록의 작성자는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일부분 기재를 누락하였는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123정장 김경일의 기자회견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는가, 123정 해경들은 과연 초기에 구조한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인줄 몰랐는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그리고 이번 청문회의 직접적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참사 당시 지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 예상 답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는바, 사전에 위증을 하기로 모의, 교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져야 함. 이 이외에도 소위 해수부 문건 작성자 등 지속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특조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고, 위의 과제를 포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sup>416</sup>



## 안전사회소위원회 청문회 평가와 과제

김혜진 /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날짜 : 2015년 12월 15일(화) 오후
- 주제 : 해양사고 대응매뉴얼(규정 등) 적정성 여부
- 1. 해양사고 관련 매뉴얼 부분
  - 표준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문제
  - 안전감독관 문제
  -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 '커뮤니케이션 대응절차'에서 '충격상쇄용 언론 대응' 등의 문제
- 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활동
  - 중대본과 중수본, 범대본 등 시스템의 문제
  - 소방헬기 등이 의전에 사용된 문제 등
  - 중대본의 대국민 브리핑의 문제점
- 3. 해양사고 관련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현장지휘체계 가동의 적정성
  - 목포서장, 해경청장, 서해청장 등이 매뉴얼에 따른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 언딘, 해양구조협회와 해경의 유착관계로 인해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닌지

### I.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청문회 평가

표준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에 따라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짚는 과정이 필요했다. 매뉴

얼이 엉망이라서 대응에 적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임의로 그 매뉴얼을 무시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대응했지만 문제해결이 안 되었던 것인지 등 매뉴얼과 연관된 대응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했다.

증인들의 답변이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기도 하고, 매뉴얼과 관련하여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별조사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이해하지만 이후 청문회에서는 최대한 많은 조사에 근거하여 증인들의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진실을 밝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지휘체계 가동의 적정성’ 여부는 안전사회소위원회의 과제일뿐 아니라,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진상규명 소위원회와 공동의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래야 후행질문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 II. 안전사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

### 1. 해양사고 관련 매뉴얼 부분

- 해양선박사고에 대해서 표준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대형 재난상황에서 안행부가 중대본을 구성하게 되는데, 중대본은 법에 규정된 총괄 지휘 조정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대본은 총괄지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 그리고 중대본을 구성하는 안행부가 이와 관련한 총괄지휘 매뉴얼이 아니라, 포켓매뉴얼과 소방방재청에서 사용하던 매뉴얼만 갖고 중대본을 구성한 것이다.
- 구조와 수색의 문제를 감독하는 안전감독관 제도가 있다.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감사를 받는 데 대비해서 호주에 있는 평가위원의 자문을 받으면서 수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감독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해경청장은 안전감독관을 구조와 수색을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직급에게 맡김으로써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점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실제로 점검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 해양사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증인들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강변했으나, 승객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된 훈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국제 ICAO에서 권고한 지침에 따르면 대형 그런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훈련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회원국인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상황, 즉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배가 침몰할 때의 훈련은 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훈련이 아니라 서면훈련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 또한 안행부의 상황관리정보통신망 교육의 경우에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전반적으로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교육과정에 축소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 매뉴얼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대응절차’에서 ‘충격상쇄용 언론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증인은 예를 들어 사고가 난 해역의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특히 새로 바뀐 매뉴얼에서는 이 내용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후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 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활동

- 총괄지휘 역할을 해야 할 중대본이 범대본과 중수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중대본은 현장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적시에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들이 주무부처, 주관기관의 기능을 지원해야 될 유관기관들이 이를테면 국방부관련 병력, 관련기관을 적시에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또는 경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광역지자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방방재청이 필요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심지어 문방부가 보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언론들을 통해서 국민과 이 상황과 관련된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이 총괄지휘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리핑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회의, 장례지원단 운영만 했

다. 실질적으로 지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범대본을 구성하고 난 이후 이곳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구조활동에 대한 부분은 중수본에 떠넘겼다. 안행부가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태세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소방헬기 등 구조에 사용되어야 할 장비가 의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전남도지사의 경우 현장에서 지휘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장의 구조작업에 이용되어야 할 소방헬기로 이동하느라고 구조작업을 해야 할 헬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해청장의 이동 때문에도 구조헬기가 늦어지기도 했다.
- 중대본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브리핑을 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4월 16일 사고당시 중대본은 6번의 대국민 브리핑을 했으나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10시반은 이미 배가 전복된 상황인데도 인명피해 상황이나 후속 조치 상황이 담기지 않았다. 그 뒤의 내용도 ‘어떤 구조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만 브리핑되었고 그마저도 대단히 과장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왜곡된 브리핑 내용을 작성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경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해경의 상황 파악 내용도 달랐다.

### 3. 해양사고 관련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현장지휘체계 가동의 적정성

- 현장지휘체계의 실질적인 핵심은 해경청장과 서해청장, 그리고 목포해경 서장이다. 그러나 이 세사람은 모두 현장지휘 책임자를 123 정장으로 몰고,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목포해경서장은 3009함에 남아 있으면서도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시도한 적이 없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123 정이나 목포서 상황실이나 진도 VTS에도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현장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총괄지휘’ 역할을 담당하기에 구체적인 상황파악의 지시 없이, 자신의 역할은 ‘총괄지휘’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모두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 광역 본부장으로서 서해청장의 역할은 대다수의 구조세력이 투입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특공대를 제대로 출발시키지 않는 등 구조세력을 투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장을 총괄지휘 해야 할 해경청장은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지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현장지휘의 책임을 지닌 해경청장과 서해청장, 목포해경 서장이 모두 세월호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고 현황 파악도 지시하지 않았으며 후에 123 정장으로부터 세월호의 침몰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그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 매뉴얼상 현장지휘체계의 책임자로 지목된 123정장의 경우 세월호와 교신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너무 바빠서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에 데이터 통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선원들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발신한 정황도 확인이 되고 있다. 현장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문의 행적을 보이고 있어서 이후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 심각한 상황 왜곡이나 거짓말, 혹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조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에 제출한 TRS 녹취록을 고친 정황이 있는데도, 이 녹취록을 누가 작성했는지 밝히지도 않았고, 잘못된 브리핑 자료도 누가 작성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목포해경서장이 증언을 믿기 어렵지만 설령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목포상황실장이 내린 명백한 퇴선 명령 등 지시를 지키지 않는 부부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별도의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다.
- 언딘, 해양구조협회와 해경의 유착관계가 일부 확인되었다. 당일 3009함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언딘의 계열사인 금호수중개발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구조가 필요한 시점에 '구난' 전문업체를 불러서 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이다. 언딘대표도 이미 4월 17일에 에어포켓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고, 인양과 관련한 논의를 한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언딘과 관련하여 해경 안에서 이미 유착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도 해경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해양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없었고,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태세도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였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당일 중대본은 총괄지휘라는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고 범률근거도 희미한 범대본과, 중수본으로 넘겼고, 사실상의 현장지휘책임을 갖고 있는 해경과 서해청장과 목포해경서장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지휘를 할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123정장에만 떠넘겼다. 123정장은 세월호와 교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상황파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23정장이 위험 상황을 보고했을 때에도 그 누구도 그에 합당한 지휘를 하지 않았다.

구조세력들이 의전에 활용되기도 하고, 중대본 등은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수색정보만을 제공했고, 그 왜곡에 동조한 이들은 하나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또다시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 III. 이후 과제

#### 1. 현장 지휘체계 적정성 관련 남은 과제

- 해상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다. 몇백억을 들여서 청와대까지 모두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제대로 상황 공유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함. 시스템의 문제인지 서버의 문제인지 등 조사가 필요하다.
- 언딘, 해양구조협회와 해경과의 유착관계와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이 조금 있으나 이 유착관계가 초동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 거짓브리핑을 했던 이들, TRS 조작에 가담했던 이들, 퇴선지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지시가 아니었다고 하는 등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명확하게 가려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 123정장이 한 데이터통신, 그리고 선원들 집으로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구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왜 다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선원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 2. 매뉴얼과 관련한 이후 과제

- 매뉴얼은 이후 이런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매뉴얼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다. 이번 중대본과 범대본, 중수본의 상황에서도 드러나듯이 시스템도 엉망일 수 있다. 따라서 매뉴얼이 실질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추후 감시가 필요하다.

#### 3. 안전사회 소위원회에 다른 과제들

-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이번 청문회에서 다룬 것은 매뉴얼 문제와 현장지휘체계

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은 아직도 많다.

-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세월호침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검찰조사에서는 과적과 불법개조, 평형수 덜어내기 상황에서 급변침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 원인의 여러 층위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그와 연관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또한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예방과 대응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는 다양한 예방대책과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메르스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조사하면서 예방과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sup>416</sup>

## 지원소위원회 청문회 쟁점 및 평가

---

박진 / 4.16연대 운영위원

### 1. 청문회 평가

참사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조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3일차 청문회는 피해자, 민간잠수사, 해수부, 해군, 해경,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연구소 등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했다. 참사현장 피해자 지원조치 문제에 대해 피해자, 민간잠수사들의 증언과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진술은 상치되었다. 피해자 정보접근권 문제에 대해 해수부와 해경은 책임 없음 또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야말로 ‘책임’없는 책임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희생자 수습과 장례지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에 대한 경험 없음을 인정했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희생자 수습과 장례지원 과정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났다. 국과수는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희생자 관리단 같은 조직을 상설화해서 대형 참사가 났을 때 (중략) 관리된 상태에서 서로 연합해서 해결하면 바람직한 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증언을 했다. 이는 우리 정부조직이 무수한 재난참사를 겪으면서도 바람직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피해자들이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 기관중 이를 책임지거나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다.

첫째,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치한 주체가 없었다. 희생자가족들이 진도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 명단이 없었고, 공무원들이 구출된 생존자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생존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생존학생이 있는지 문의했을 때, 칠십 명에서 구십 명 정도의 생존학생이 더 올 것이라고 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문의했을 때 더 이상의 생존학생이 없다고 알려주는 등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를 바로잡지도 않아 혼란과 피해를 주었다. 또, 브리핑 담당자를 비롯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을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사고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계속 교체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피해자들보다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둘째, 희생자가족들에게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었고, 징계 등을 통해 책임진 사람도 없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에서는 보트 몇 대만 있는 등 구조상황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사당일 200명 가까이 잠수인력을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4월 17일 잠수가 중단됐고, 고무보트 조차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잠수부가 500명 투입되었다 발표하고, 4월 18일에는 600명을 투입했다 발표했다. 4월 21일 함정 214척, 항공기 32척, 구조대원 600여명으로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으나, 가족들이 항공기가 32번 이륙했다는 뜻이 아니냐 항의하지 시인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에 핫라인을 통해 세세하게 구조작업상황이 보고됐음에도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도 피해자가족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

셋째, 참고인으로 참석한 민간잠수사의 증언을 통해 해경이 민간잠수사를 위협에 내버려두고,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쉬는 공간이나 화장실, 숙소, 의료지원까지 제대로 없었다. 자원봉사자가 오기까지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또, 무리한 잠수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선내에서 희생자를 발견하고 다음 잠수사에게 설명했다가 찾지 못했을 경우, 결국 자신 결단으로 무리하게 재입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경이 “가족들이 청장, 장관을 잡고 있다.”며 무리한 입수를 강요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 설치시 해경이 도면제공이나 설명도 하지 않는 등 해경이 수색에서 자신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 잠수사에게 의료지원은커녕 의약품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잠수사의 수

색 중단시에도 중단 당일인 7월 9일 오전까지 작업하고 오후에 통보받는 등 최소한의 예우도 지키지 않았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주영 장관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다른 민간잠수사에게 물었으며, 결국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민간잠수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고 이광호 잠수사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해경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민간잠수사의 일방적 활동중단 과정과 목적, 민간잠수사 죽음에 대한 해경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시신 수습 후의 정부지원에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 4월 22일 이전에는 냉동보관소가 없었고, 드라이아이스 위에 수습자의 시신을 보관했으며, 수습자 확인과정에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이름을 직접 적는 일까지 발생했다. 수습자의 장례를 위한 이동에서도 초기 앰블런스로 이동하다가 이후 냉동실있는 영구차가 지원되는 등 피해자들의 항의와 지적 없이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답하는 정부 관계자는 없었다. 참사 초기 혼란을 이유로 댔으나 이는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무함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이후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행정시스템이 따로 돌아가며, 재난참사에 대한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이주영 전장관은 언론 오보에 대해 해경이 실책했으며 해수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해경과 해수부는 실제 투입한 잠수사 숫자를 가지고 실제 구조 상황을 설명했어야 하지만 주변 동원가능한 세력을 ‘투입’이라 표현하면서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전 장관은 과장을 지적하고 실제 투입한 인원으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장관 지시 이후에도 몇 십배로 늘려서 발표한 정황도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징계등을 받은 정부 관계자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사 초기의 오보는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던, 참사대응에 대한 정부 무능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 II.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

첫째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보 전달은 의도적으로 왜곡되었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현재 인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나 참여의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

참사 초기 가족들 도착해보니 생존자 명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 대한 장악력이 전혀 없는 정부에 의해 피해자들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심지어 피해 현장인 팽목항으로 이동을 안내하는 사람조차 없었으며, 현장 최고 책임자조차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다. 이로 인해 참사 초기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들을 식별할 수도 없었고 중대본 구성 뒤,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 오보로 인해 불신은 깊어졌다. 심지어 가족들이 요구하면 마지못해 들어줬지만, 참사 대응이라기 보다 분노한 피해자들 뒤에 숨는 모습에 불과했다.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개인 징계등 책임진 사람은 없었고 이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참사 초기 상황보고서등의 오류에 대해 해수부는 회의자료 조차 없다고 진술했고, 보고서에는 명확한 책임주체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보고의 오류, 정보제공의 왜곡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보고서에 등장한 잠수사나 구조선박등의 오기는 '동원세력'과 실제 구조인력과 분명한 차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왔던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동원세력 500명이라고 언론을 향해, 말할 때 해수부 장관은 이의 오류를 알고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에는 정확한 상황보고 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보고 했으나 피해자, 희생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둘째 민간잠수사들에게 수색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잠수사들은 참사초기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내자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물때에 대한 정보가 틀리거나 가이드라인이 작업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는 등 정보제공이 없었다. 실제 수중 수색을 수행한 횡수와 기록에 기재된 횡수가 달랐다.

셋째 잠수사 처우와 계약 해지 과정에 문제가 심각히 드러났다. 수중수색에 주요

한 역할을 수행한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숙박, 식사, 복지, 노동시간, 잠수와 관련한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1일 4회 잠수를 할 정도로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했다. 가족이 장관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민간잠수사들의 작업을 재촉한 것도 드러났다. 그러나 의료적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해군 증언에 따르면 정부가 이에대한 책임을 서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간잠수사가 사망했으나 법적 책임은 동료 잠수사에게 넘어갔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분명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민간잠수사들은 피해자지원특별법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넷째 참사초기 수습 등 지원체계 없음이 드러났다. 병원간 네트워크 체제도 없었다. 대형참사에 대한 재난참사 경험 없음이 드러났다.

### Ⅲ. 이후 과제

정부의 피해자 지원은 구조 실패의 연장에 있었다. 특조위의 난항 등 규명되지 못한 진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현안으로써는 기간제 교사 차별, 민간잠수사 형사 기소, 배보상 절차 등의 문제로 정부주도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주도되고 추모와 기억사업은 범죄시 되고 있다. 참사의 이중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지원사업은 총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이 피해자특별법에 의한 보호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진도어민이나 단원고 교사, 학생 등도 보이지 않는 피해집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만큼 참사는 총체적 피해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새로 정립하면서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참사초기의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참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피해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통제하고 감추는 과정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들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피해자들의 마땅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지와 응원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막는 정부, 국회, 언론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시스템을 총 점검해야 한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트라우마는 생애 주기 전반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기억과 추모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등과 피해자가 직접 갈등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중, 피해자 지원과 추모 관련한 과제를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 <기조와 방향>

1. 지원 대책은 참사 직후에 이루어진 활동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의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이어야 한다.
2.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점검하고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구조와 지원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피해와 관련한 범위에 노출된 참사 피해자들도 포함 되어야 한다.
3. 참사 피해 범주 역시 생명과 신체, 정신적, 재산상 직접적 피해는 물론 구조활동·피해자 지원 과정과 언론보도·불건강한 사회적 소통방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피해를 포괄해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피해자들이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지원활동의 점검은 피해자들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표현하지 않고 참아내는 고통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 현대의 모든 재난참사 발생은 사회적 원인에 의하며, 책임도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재난참사 지원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러한 국가 지원의 범위는 치유를 위한 공동체 지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7.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평등하고 차별 없이 권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접근에 있어서 권리 침해 없이 친절한 정부와 제공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는 모두 피해자를 위해 간소하고 통합적인 절차여야 한다.
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가 기억해야 할 내용과 방식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유무형의 추모사업 내

용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다.

9. 추모 사업은 추모(기억), 안전, 치유, 교육 내용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0. 추모 사업은 과거의 슬픔을 딛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접근성, 지속성, 정서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추모 사업은 정치적 고려 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계획되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12. 추모 사업은 지역사회 치유와 미래세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통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 세월호 선체와 교실, 유품 등 진상 규명, 추모와 기억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중히 보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해야 한다.
14. 피해자와 국민 여론을 모아 정부부처, 지자체 등 관련 단체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추모위원회에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적, 지속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
15. 피해자 지원과 추모는 진상규명이 끝난 후에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설명과 사과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져야 도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416



## 첫 번째 청문회의 쟁점 및 앞으로의 과제

발행처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02-2285-0417 416network@gmail.com

※본 자료는 4.16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2285-0416

홈페이지 [www.416act.net](http://www.416act.net)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